

국방과학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 제154회 임시국회 본회의 (1991.4.24)에서
李光魯 의원과 李鍾九 국방부장관 간담 –

국방부 는 2월 21일 「획득개발 기본 정책방향」을 정립하여 획득 개발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종전 국과연(國科研) 위주의 연구개발체제를 업체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무기체계 획득관리 규정 등을 현재 개정중에 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내용이 국회에서 다루어졌다. 4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자당 李光魯 의원은 국방과학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李鍾九 국방부장관은 국방비대비(對比) 연구개발 투자비를 2000년도에는 5% 수준까지 증액시키겠다고 답변하였다.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李光魯 의원 질의

미국의 「존 파이크」라는 과학자는 걸프전쟁의 결과를 두고 『철(鐵)의 문화에 대한 실리콘 문화의 완전한 승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이라크의 재래식 무기체계와 다국적군의 초 현대무기체계를 비교하여 표현한 것으로, 토마호크, 패트리오프 미사일, 스텔스 전폭기등의 운용체제가 컴퓨터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보 및 군 조직관리까지 컴퓨터에 의해 이루어진, 최첨단의 무기 및 운용체제를 보유함으로써, 전투역량을 극대화하여 완전한 승리를 기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래전(未來戰)은 무인기(無人機), 바꾸어 말하면 로보트전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는 과학자까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장차의 무기체계는 점점 더 첨단·고도·정밀화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李鍾九 국방부장관



李光魯 의원

따라서 국방의 과학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국방의 과학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

과연, 우리는 이러한 무기체계와 비교하여 얼마나 현대화되어 있는지 ?

또한 북한의 무기체계 발전추세는 어떠한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李鍾九 국방부장관 답변

李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방과학화를 위한 연구개발투자 확대는 2천년대 자주국방의 대전제로서,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국방비 대비(對比) 연구개발 투자비를 현 2% 수준에서 2천년도에는 5% 까지 증액시킬 계획입니다.

북한은 지난 60년대 전차, 총포, 탄약을 비롯 재래식 무기 개발에 일찌기 착수하였으며, '80년대에 들어와 스커드 미사일과 화학무기 등을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70년대에 재래식 무기 개발에 착수하였으나, 고도 첨단병기는 조기 전력화(早期 戰力化)를 위해 대부분 해외에서 도입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자주국방의 핵심인 지휘 통신체계의 자동화, 조기경보, 전장감시 및 항공능력 보강을 위한 신소재, 인공지능 컴퓨터 등의 핵심기술 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또한 기존장비의 성능개량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발방법 또한 정부주도에서 업체주도로 전환하고, 실질적인 산·학·연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특히 국방기술정보센타를 설립하여, 명실공히 국방과학기술 도약은 물론, 민수과학 기술에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획득개발 기본정책 요지

* 현 실태

우리는 '70년대초 국내·외 여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주국방의 목표아래 방위산업 건설과 전력 증강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미국의 TDP를 이용한 재래식 장비의 모방개발에는 성공하였으나, 핵심기술 개발이 미흡하고 무기체계 장기소요 도출이 미흡하였다. 또한中期소요도 소요시기가 임박하여 선정함으로써, 대부분의 무기체계(약 63%)는 직구매하게 되었다.

기술도입도 미국 위주로 추진함으로써 미국의 견제시 기술확보 및 가격인상 요인 배제가 곤란하고, 기술이전을 위한 직접절충교역도 저조하였으며, 소요단계의 中·長期 기획 결여와 획득시기 압박으로 非계획적인 단위사업별 무기체계 획득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 발전방향

이와같은 무기체계 획득개발 정책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산국을獲得開發局으로 개편하고, 정책주도적으로 획득개발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획득개발 기본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 소요기획과 연동된 획득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성있는 획득사업 추진
- 국내개발 또는 직구매등 정책 주도적인 획득방법 의사 결정
- 國科硏 위주에서 탈피, 국내개발시 업체주도 영역 확대
- 연구개발에 대한 산발적인 투자에서 집중적인 투자로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 주요 핵심부품의 집중적인 개발 착수
- 기술도입 대상국가 및 직접절충교역 확대 등 국·외기술 도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획득개발 기본정책은 무기체계 획득관리 규정에 반영되어, '92년부터는 長期 소요기획과 聲動된 획득

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렇게될 경우 國科硏은 學界와 공동으로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업체는 국과연이 수행해온 연구개발사업의 상당부분을 업체주도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 방산(防產) 육성

周知하는 바와 같이 방산정책은 과거 20여년간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개발이 다소 용이한 재래식 장비는 거의 개발 완료되고 국내소요도 소진(消盡) 되었으며, 개발이 곤란한 고도정밀병기는 전력화 시기 압박 등으로 대부분 직구매해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 방위산업이 다시한번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체가 함께 힘을 모아, 핵심부품 및 신기술을 집중 개발하여 軍이 요구하는 고도정밀병기를 소요시기내에 개발할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과연은 학계와는 非경제적인 전략 비익(秘匿) 병기와 핵심기술을 집중개발하고, 업체는 主조립업체 주도하에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핵심부품과 신기술을 개발해나가야 하겠다(시설투자비는 商工部 기금 활용).

이렇게 핵심기술과 핵심부품이 產·學·研 합동으로 개발될수 있을 때 우리의 기술수준은 한 단계 발전되고, 방위산업도 국제경쟁력을 갖춰 재도약의 시기를 맞을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 R & D 투자확대 필요성

- 국내개발 촉진에 따른 시스템 개발 확대
- 핵심부품 기술개발 증대
- 업체주도 연구개발 확대(기술개발비 추가 지급)
 - : 약 40% 증가
- 시험평가 및 품질보증 강화
- 획득 및 기술정보활동 강화

※ 국방비대비 연구개발비('89 國防政策書) :

3% (1996년), 5% (2000년), 7% (2005년)